

보도시점 2025. 5. 19.(월) 16:00 배포 2025. 5. 19.(월) 16:00

## 청년농업인에게 직접 듣고 미래를 구상하다

- 제25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개최
- 2025 농어촌 삶의 질 지수 공표 등 보고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5월 19일(월) 제25차 본회의를 서울 aT센터에서 개최하였다.

장태평 위원장을 비롯해 정부위원 2명과 위촉위원 19명 등 모두 22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4건의 안건을 보고하였다.

심의 안건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중장기 정책 방안(안)」으로 농어업위가 '24년부터 4회에 걸쳐 청년농업인 권역별 현장간담회(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충청권 150여명 참석)를 개최하여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계, 관계부처 및 농업인 단체 등 12명의 전문가 논의를 거쳐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농업의 성공적인 세대전환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①예비농업인제 도입을 통한 창농 준비지원 강화, ②선도 농업법인의 시스템을 활용한 청년농업인 성장 지원, ③청년농업인의 창업 후 성장을 위한 후속지원 방안, ④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자체 주도의 청년농업인 육성, ⑤사업성 및 경영능력 평가를 통한 자금지원 방안 마련 등이다.

보고 안건으로는 농어업위가 작년부터 발표해 온 「농어촌 삶의 질 지수」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5개영역 20개 세부지표를 기반으로 객관적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139개 시·군 농어촌지역의 삶의 질 지수를 산출하였다. 139개 시·군 중 도시형 도농복합시(10개)를 제외하고 종합지수와 분야별 지수에서 상위 30%에 해당하는 지역을 농어촌 군지역(79개)과 도농복합시(50개)로 구분하여 공개하였다.

또한 최근 경상지역에 발생한 산불 피해의 현실성 있는 지원과 복구를 위해 농어업위 내 산림특별위원회에서 조치한 사항에 대해 보고하고, 농어업위와 삶의질위원회와의 통합추진 상황 등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주제 발표는 고무현 풀무원 상무가 「적정기술을 활용한 풀무원 농축수산 혁신사업 추진」에 대해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농업분야에서 적정기술을 활용한 해외 시설 스마트팜 사례를 소개하고, 노지 스마트팜에서 자동화 및 로봇틱스 기술을 활용한 저탄소, 친환경 농업사례를 발표하였다. 또한 식품산업에서의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설명하고 토양 내 탄소를 격리시키는 방법인 바이오차(biochar)를 제조하여 농지에 재투입하는 ‘Net Negative 스마트 모델’에 대해 지자체와 연계·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장태평 위원장은 “우리 농어업·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에 농어업위 위원들의 열정적인 논의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제안이 우리 농어업·농어촌의 미래를 밝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붙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중장기 정책 방안(안) 요약자료

담당 부서	사무국 총괄기획팀	책임자	팀 장	송지숙 (02-6260-1211)
		담당자	사무관	한소자 (02-6260-1212)



##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중장기 정책 방안(요약)

### □ 추진배경

-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인력 구조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 농업세대인 40세 이하 청년농업인 비중은 지속 감소  
※ 경영주 연령별 농가비중(65세이상/40세미만, %) : '90년) 18.3/14.6 → '24년) 69.6/0.5
-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지원하는 중장기 정책 개선방안 모색

### □ 추진방침

- 초기 창농 단계에서 성장, 도약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자금, 농지, 기술,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농업 경영자로 성장기반 마련
- 규모화·전문화·혁신화를 목표로 스스로 성장하는 역량을 갖추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책임과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재로 도약
- ☞ 청년농업인을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과 혁신을 이끌 핵심 세대로 육성

### □ 중장기 정책 개선방안

#### ① 영농정착률 향상을 위한 창농 준비지원 강화

- 예비농업인(경영체)제 도입: 영농기반이 없어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예비농업인(경영체)' 등록을 허용하여 창농·농지 등 각종 정책지원 대상 포함  
\* 농업교육·훈련 및 경영(세무, 회계 등)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
- 창농준비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영농기술 습득, 멘토 관계 구축 등 영농경험을 쌓고 창농에 필요한 자금 축적 등 사전 준비시간 부여
- 현장 실습형 농장 확대: 선도농가, 농업법인 등 실전 경영현장에 참여하여 실습, 영농경험, 학습이 가능한 현장 맞춤형 실습 운영모델 마련
-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을 부활하여 법인의 청년농업인 고용 유도
- 청년 파트너십형 창업지원 모델 육성: 인턴-정규직-독립농 등 법인 내 단계적 경력 설계를 통해 창업 성공률 제고

## ② 농업법인 등 공동영농 참여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을 창업 위주의 개별 경영체 중심에서 벗어나 농업법인 등 공동영농참여 청년농을 포함한 정책으로 확대 개편
  - 정책 대상 확대: 가족 종사자, 농업법인 참여자도 정책자금 지원
  - 농업법인 참여 유인 인센티브 지원(가칭청년농업인 도약 지원 계좌)
- 후계농 부재로 소멸되는 고령·은퇴농(법인)의 자산과 경영권이 청년농업인에게 단계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및 정책 마련
  - 은퇴지원제도\* 확대, 농업법인 지분양도 및 임원 변경 철자 규제 완화
  - \* 법인내 퇴직연금+이양 보상을 병행하는 경영승계 지원, 충남형 고령·은퇴농 농지이양 등
  - 고령농-청년농 매칭 플랫폼 구축, 법률·세무·경영 등 농업 분야 전문 컨설팅 시스템 마련

## ③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년농업인 육성체계 구축

- 민관거버넌스 구성, 실습농장 구축, 영농교육, 지역 특화 수익모델 제시, 정착방안 등 지자체 중심의 청년농업인 육성계획 수립 및 패키지 지원
- 자자체별 One-Stop 서비스 체계(가칭청년농업인 통합지원 전담조직)를 도입하여 창농 준비부터 교육·농지·금융 등 모든 분야 컨설팅 제공
- 유휴 농지 등을 활용한 조성형(분양형) 농장 확대로 정착 유도

## ④ 성장역량 중심의 농업금융 지원제도 마련

- 정책자금 신청 전 개인신용 및 자금 대출 가능 여부 확인 의무화
- 농신보에 금융지원상담센터를 마련하여 자금 실행 여부 종합 상담·지원
- 청년농업인 영농능력 평가모형을 개발하여 담보 중심의 지원에서 사업성, 경영능력 중심으로 보증체계를 개선
  - 영농 준비가 부족한 청년농에게 자금이 지원되어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창업 후 규모 확장(scale up)을 희망하는 청년농의 성장·도약 지원

## □ 기대효과

-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농업세대 전환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농촌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고, 농업의 혁신성장을 촉진